

CONTENTS

- 1 열린단상 | 방폐장 유치, 군산시민 손에
- 2 JDI 시사 리서치 | 도시열섬현상, 원인과 대책
- 3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전북권 공청회 토론포럼)
- 4 JDI 특집 제3회 서해안포럼(기조연설요약)
- 5 JDI 특집 제3회 서해안포럼(주제발표요약)
- 6 JDI 특집 제3회 서해안포럼(종합토론요약)
- 7 연구원소식
- 8 연구원소식

열린뉴스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방폐장 유치, 군산시민 손에

분열과 갈등 대신 희망과 비전의 도시로

군산시를 비롯한 포항, 경주, 영덕 등 전국 4개 시군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서 유치전이 4파전으로 압축되면서 20여 년을 끌어난 방폐장 건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9일 산업자원부에 비용도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방폐장 유치신청서와 함께 시의회 동의안을 제출한 뒤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최종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지역에 대해 오는 9월 15일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이들 4개 신청지역은 이미 부지안정성에 대한 잠정적 적합판정을 받았고 지방의회 동의라는 여론 수렴을 거친 상태라 주민투표가 모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는 11월 22일 이전 정해진 날짜에 동시에 진행된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되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된다.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다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점검과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2006년말 ~ 2007년초 최종 부지로 확정된다. 부안사태를 경험한 산업자원부가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방폐장 유치의 최종 결정권을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맡긴 것이다.

이제 방폐장 유치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미 군산시는 그 동안 여론조사 결과 지역 주민의 60% 이상이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 있는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다. 산자부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과 양성자가속기 유치, 특별지원금 및 반입수수료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다. 군산시도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세계적인 에너지과학도시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방폐장이라는 숨은 성장엔진의 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양성자가속기 등과 연계해서 군산을 에너지과학의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복병도 만만치 않다. 군산과 이웃한 충남 서천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가 하면 전국의 반핵단체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또 유치신청서를 낸 후보지역의 반대단체들이 연대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안사태와 같은 혹독한 대가를 치른 전라북도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하고 지역과 지역의 공동발전에 대한 윈-윈 전략을 세운다면 새로운 국책사업 유치모델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다.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사실호도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차단을 통해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또 본질에서 벗어난 명분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왜곡된 수단으로 남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방폐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유통되고 이를 근거로 자유스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주민투표에 반영될 때 군산은 갈등과 분열 대신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의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 전북발전연구원장 한 영 주



전북발전연구원 열린뉴스
2005년 9월 통권 제4호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5년 9월 2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http://www.jd.re.kr
TEL. (063) 276-2060
FAX. (063) 276-2069

도시열섬현상, 원인과 대책

2000년 현재 세계의 도시지역은 지표면의 약 0.2%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류의 절반가량이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바로 이곳에서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발생된다. 인구가 집중하고 있는 도시는 농촌이나 자연녹지에 비하여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자연지형의 변화, 교통량의 증가 및 주택과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열수지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도시의 기상변화를 유발시킨다. 결국 도시화현상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밀화된 건물의 집적, 지표면의 포장, 식생의 부재, 그리고 증가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도시대기의 물리적인 상태와 화학적인 조성을 변화시킨다. 이 결과로 도시지역에서 대기의 온실효과에 따른 온도상승, 대기순환과 통풍의 장애가 나타난다. 이는 도시 기후환경을 변화시켜 신선한 공기의 생성이나 유입 혹은 대기순환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확산과 해소를 방해하게 된다. 결국 도시의 공기는 정체되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도시민의 건강, 즉 대기위생과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열섬현상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대기오염과 도시의 열섬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억제와 같은 기계적 필터링 방법을 주로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발전하는 환경공학 기술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현재보다 약 5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엇보다 거시기후의 영향과 도시화현상의 영향에 이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도시 열섬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기계적·물리적 필터링 방법만으로는 도시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런 방법으로는 양질의 복지와 번영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기후협약을 통하여 CO₂ 배출량의 규제를 통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관점에서의 법적·정책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향후 10년 내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9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친환경적 신도시의 건설”과 같은 개발방식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이다. 즉, 단순히 공단지역이나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기술적 필터링작업 뿐만이 아닌, 도시지역의 지형, 복사열수지, 풍향, 풍속 등의 요소들이 자연생태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기순환의 메커니즘을 회복하는 입장에서의 도시개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친환경적 도시개발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

하고 공기순환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즉,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신선한 피를 생성하는 허파의 기능을 필요로 하듯이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도시 내·외곽의 나대지, 초지, 녹지 및 수변공간 등을 적극 보전할 필요가 있다. 도시에서 신선한 공기를 생성하고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녹지나 소류지가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기초조사를 통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소류지나 하천의 물길은 도시에 숨어있는 잠열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이동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보전방안은 더욱 절실한 형편이라 하겠다. 둘째, 허파에서 생성된 피가 혈관을 통하여 신체에 골고루 전달되듯이 자연녹지에서 생성된 신선한 공기가 도시의 전체 공간으로 원활히 전달되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도시의 대기환경적 관리를 위해 신선한 공기축의 보전을 위한 기후지도 및 도시기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녹지와 수변을 중심으로 바람의 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며, 도시내부의 모든 지점에 골고루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나아가 이는 택지개발의 입지선정이나 건축물의 배치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녹지의 확대와 열섬현상의 강도를 낮추기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피복재질과 색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인공적 물질로 토양의 피복이 과도하게 덮일 경우 복사열의 발생에 따른 열섬현상의 강도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적률 규제와 더불어 피복률의 규제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건축물이나 도로와 같은 인공지물의 피복재질을 어두운 계통에서 밝은 색채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건축물의 배치는 바람길이 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초보적인 수준의 열섬방지 방안이다. 적극적으로 태양광의 복사열을 피할 수 있도록 식재를 통한 그늘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피난공간으로서 식재공간이 도시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면 여름철 도시민은 열섬현상에 따른 기후부담의 저감효과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도시 삶의 영유를 위해서는 도시지역 대기환경의 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더욱이 에너지 비용의 증가에 따른 건축물 유지비용의 증가와 공기조화 설비만으로 건물내부 공기의 질을 조절해 왔던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건축물의 내부환기를 위해서 외부환기의 적극적인 이용이 건축계에서 연구 및 시도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여건 마련을 위한 도시외부공간 대기환경의 질 개선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 전북대학교 교수 황지욱

소리만 요란한 서해안시대, 껌데기뿐인 전북권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전북권 공청회』가 9월 1일 전북도청에서 지역의 각계 전문가,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발전연구원 한영주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역의 각계 전문가들이 새만금신항만 등 전북의 현안사업이면서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나 하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전북권을 신산업생산물류중심권역으로 수립해 놓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하위계획을 누락시켜 알맹이 없는 껌데기뿐인 전북권이라는 강한 비난이 빚뿜졌다. 한영주 원장도 국토계획이야말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국토의 그랜드디자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주』

주중권(전라북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새만금 신항만계획은 2000년 당초의 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새만금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이번 수정계획에서 누락된 것은 모순된 점이다. 새만금신항계획의 누락이 물동량 부족과 소송진행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물동량은 현재 물류연구원에 연구과제로 발주한 상태로 2020년 물동량이 충분히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에 대하여 이미 해수부에서 47억 원을 들여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2009년에 착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이번 수정계획에서 누락될 경우 새만금신항 계획의 반영과 실현성은 2010년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

이양재(원광대학교 교수)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전북을 호남권에서 전북권으로 독자권역을 설정한 것은 고무적 일이나 독자권역으로 설정만 해놓고 내용은 호남권과 다른 점이 없는 껌데기뿐인 전북권이다. 전북의 목표가 신산업물생산·물류중심권역으로 설정했으면 하부계획으로 물류중심지가 될 수 있는 사업 반영은 필연적이다. 이번에 농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충남 태안, 서산과 전남 해남·영암을 관광레저형기업도시로 선정해놓고 새만금복합레저관광도시를 배제시킨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장기적 국토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소송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배제한 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 수정계획에서 낙후지역과 농·산·어촌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며, 동북아 관광거점으로서 시설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무주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를 선정하고 현재 진행 중이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이미 대통령계도 보고가 되고 삼성경제연구원과 에너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전북의 현안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은 테마파트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과 연계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전국에서 유일한 전라북도만의 전략산업이며, 이미 국토계획이 정부 각 부처의 협의를 거친 상태다. 또 2004년부터 산자부 예산에 의해 사업이 진행 중이며, 부가가치와 고용효과 측면에서

실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국가 정책차원에서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현재 3%에서 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수사업이며, 이미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가 관련 법률의 개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시대에 지방정부가 발굴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앙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상기해야 한다.

정철모(전주대학교 교수) 익산시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에 포함시켜 놓고도 수정계획에서 누락된 것은 모순이다. 익산 시에는 백제문화유적이 산재되어 있고, 고도보전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반영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지역 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양선사문화권특정지역 계획을 국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이미 사전환경성 검토까지 마친 상태로 총 43개 사업, 1조 8천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특정지역을 해양선사문화권과 동부산악권의 2개로 나눠 지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동부산악권을 특정지역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경재(전북일보 편집국장)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오지 아닌 오지다. 수요자 논리와 경제적 논리에 근거해서 인프라 투자를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SOC는 정부에서 투자해서 국민의 안정적 삶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고, 장기계획의 성격을 감안할 때 유럽과 같이 보편화된 경비행기의 이용이 목표년도인 2020년에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수준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2020년이 되면 경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계획의 수립기준도 분권시대상황에 맞게 중앙정부의 기준과 잣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용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무엇보다도 지역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중앙부처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인구의 안정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최병수(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팀장) 전북권 발전방향에 미반영 사업으로 분류되어 토론자들이 강조한 새만금, 새만금신항, 새만금복합관광레저단지, 김제공항, 백제문화권과 서해안해양선사문화권개발,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조성, 무주 관광레저형기업도시 등 7개 분야를 듣고 협의해서 반영할 분야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되는 사업도 있어서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정리 중이므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리 환경·지역개발연구팀장 이창현

‘서해안 시대의 중국교역패턴과 동북아물류거점전략’ 개방적 통합물류시스템 전환을

중앙대학교 방희석 교수



『전북발전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 서해안 연안에 위치한 5개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3차 서해안 포럼이 지난 8월 24일 군산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기조연설, 주제발표, 토론내용 등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1979년 중국은 개방화 정책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가 장기침체를 거듭하고 있던 1990년대 중반부터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무역은 일본, 한국, 대만, 아세안 등 주변 아시아 국가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한 다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삼각무역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한·중간 교역액은 통관 검사 등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고 경제통합이 가속화 될 경우 2004년 약 793억 달러에서 2011년 2,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2004년까지 확대추세가 지속된 후 2005년부터 감소세로 반전되어 2008~2010년경 무역수지 균형이 달성된 후 2011년 이후 한국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보았다.

중국의 해안선 연장은 18,400km에 달하며 6,400여 개의 도시를 보유하고 있다. 연간하역량 1만톤 이상의 항만이 222개, 1백만톤 이상이 39개, 1천만톤 이상이 11개가 있는데, 상해이남지역에 70% 정도 집중되어 있으나 한중수출입화물의 2/3 이상이 상해 이북의 산둥반도와 요동반도를 포함한 발해만 일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상해 이북지역의 GDP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중 가장 물동량 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지역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이며, 동북아지역 물류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으로는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 역내교역 비중의 증대, 중국중심의 항로재편 등을 들었다. 세계 경제 규모의 약 20%를 점유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이 세계 화물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북아내 한·중·일 3국간의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역내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물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동북아 삼국(한국, 중국, 일본)이 Win-Win 할 수 있는 국제물류의 공동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북아 물류중심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동북아 통합물류시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협력적」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대내외 무역 환경의 급변으로 무역이 한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

운 무역 전략의 수립과 함께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생산요소 무역을 포함한 복합무역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동북아 물류중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건교부, 재정부 등은 기존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의 핵심으로 배후단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화물창출형’ 항만으로 도약하는 독자생존형 패러다임에서 경쟁과 협력에 바탕을 둔 개방적인 통합물류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우리 항만의 실질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동북아 3국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서해안권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인천, 평택, 당진, 군산, 목포 등 서해안 항만간의 Network 구축과 ‘협력적 경쟁’, ‘협조적 경쟁’, ‘경쟁속의 협력’이라는 Co-opetition(Cooperation과 Competition의 합성어) 전략을 통해 부산항과 광양항과의 집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일본 그리고 해외로 연결하는 환경해 국제물류네트워크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북아 역내 물류교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중·일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고 물류산업이 취약한 중국은 보관·분류, 한국은 가공·포장, 일본은 유통·판매 등을 중심으로 역할분담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항만 부가가치 창출, 중국은 상품가치 제고, 일본은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중국 교역항으로서 서해안권 항만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항만배후부지 확보가 매우 시급하며, 대중국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가 유지되더라도 가공 및 포장, 라벨링과 같은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기능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항만의 고객유지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이는 동북아 물류중심지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중·일 3국간 물류협력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국간 피터항로의 효율적 운영 및 확충이 필요하며, 물류협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 네트워크와 물류정보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해운항만 교육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인력 인턴제도의 도입과 국제물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해안 물류 · 교통망 개발 시급



『동북아물류의 여건변화와 서해안축의 역할』
배후 경제권 형성이 관건
 이철식 충남대학교 교수

동북아 물류여건변화를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선박대형화 경향, 항만운영 · 문류 정보화 발전, 선사간 전략적 제휴 확산, 동북아 해운 · 항만산업 성장, 중국 항만의 발전으로 특징짓고 중국 컨테이너항만의 급성장을 큰 변화로 지적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한 서해안축의 향후 역할과 관련 서해안축 물류시설의 SWOT분석을 통해 서해안축이 무한한 개발잠재력, 중국항만과의 가까운 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열악한 배후경제권, 부족한 수송수요, 전반적인 저수심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서해안축의 개발방향은 사전적인 배후경제권의 형성 및 중앙과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관건, 중심항보다는 중국항만과 국제물류전략으로 연계된 물류센터로서의 물류시설개발, 항만으로 주변화물에 대한 충분한 수송수요를 갖는 산업단지가 존재하느냐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항만개발은 선박대형화, 선사의 움직임 및 해운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항만의 개발보다도 운영수익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국제물류(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GSCM) 전략을 활용한 서해안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물류허브정책의 평가와 대안』
차별적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하헌구 인하대학교 교수

참여정부의 동북아 물류허브정책의 평가에서 경제자유구역별 전략적 차별성 부재를 지적했다. 동북아 물류허브정책의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인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있어 인천, 부산, 광양의 각 구역별 전략이 모두 물류, 비즈니스, 레저를 추구함으로써 차별화가 없다는 것과 인천공항의 허브공항화는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부가가치를 얻는데 한계가 있고, 부산 · 광양항의 허브항 추진은 중국 및 일본 항만과의 경쟁이 심화되어서 환적화물 감소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미흡, 노선 · 연계교통망, 배후단지 등 주변 경제활동 활성화 미흡, 세계적 물류전문기업 육성 요원, 다양한 스펙트럼의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별 전략적 유치대상산업과 기업을 선정하

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추진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실질적인 one-stop service 제공과 여타지역과의 실질적인 차별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와 배후단지의 항공물류 부가가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하고 부산 · 광양항의 동북아 항만물류허브화를 위해 서해안 항만의 가능성과 추진력의 집중, 그리고 상호경쟁적 항만에서 상호보완적인 단일항만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수의 세계적 물류전문기업 육성, 다양한 물류전문인력의 육성 및 수요증대 정책 추진, 물류기업에 대한 세제 및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해안물류철도망구축 방안』
경부선 철로 서해축 분산해야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적으로 균등한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부축 중심으로 이루어진 철도망을 서해축 등으로 분산하여야 하며 이는 현재 선로용량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경부선 서울-대전구간의 선로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물류수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광양항의 배후노선 기능을 담당하는 전라선의 수송능력증대 및 서해축의 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남북 및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수도권 서측 우회노선의 확보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해안 철도망 구축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전라선의 익산-순천 복선전철화, 순천-여수 복선전철화, 장항선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화, 온양온천-대야 복선전철화, 군산선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둔대-예산 복선전철, 부곡-곡산 복선전철, 수인선 인천-수원 복선전철을 제시했다.

또 서해안 철도망이 계획대로 구축된다면 경제 · 사회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들고 특히 서해축 철도망 구축에 따른 효과를 2020년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통행시간 절감효과 연간 6,425억 원 규모, 차량운영비 절감효과 연간 2,666억 원 규모, 교통사고 저감효과 연간 484억 원 규모, 환경비용 저감효과 연간 277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서해안 철도망 구축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총 3,025억 원, 임금유발효과는 459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25만 명 정도로 예측했다.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세의 계속 유지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하고, 효과적인 철도시설투자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황해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립해야

박창호(재능대학교 교수) 첫째, 서해안 항만의 선결과제로 5개 시도 항만의 특징을 살려 특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항만별로 보면 인천항은 경제자유구역과 접경구역이면서 서해안 최대항이므로 Sea & Air 항만과 중국과의 연결이 장점이며, 남북교역 역할을 감당하고, 평택항은 수도권 산업협력을 주로 담당하도록 한다. 군산항은 중국 산둥반도와 거리상 근접하고 중부권 산업항만 관광역할이 가능하며, 따라서 수산, 수산가공산업, 조선, 해양 기능 등을 갖춘 인테그럴 포트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서해안 연단권 형성을 위해 해안도시와 배후 거점도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서해안시대의 선결과제는 권역마다 해안도시와 배후 거점도시의 협력 즉, 인천-서울, 수원-평택, 목포-광주, 군산-전주 등 서해안 연단권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박형창(전북발전 연구위원) 동북아 경제권 통합에 대비하여 중국과 일본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물류거점지역으로 또 물류제조서비스의 업적으로 서해안이 거듭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대 중국에 대응한 특히 동북아 경제권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해안 지역의 산업, 인프라(물류) 부분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지역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안광명(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물류실장) 부산-광양권의 물류허브 추진이 서해안 항만개발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 한·중·일 교류 활성화와 항만, 해운망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해안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전략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그러나 그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Business 모델을 먼저 세우고 개발전략을 추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종문(남서울대학교 교수) 첫째, 동북아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동량이다. 그러나 무역 외에 물동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 정부측으로 집중된 물동량을 서해안축으로 가져오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또 인프라의 구축시 적절한 수요예측과 기능정립, 항만의 활용 및 배후 물동량과 연계한 물류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하다.

이경재(전북일보 편집국장) 첫째, 서해안축 중심의 물류허브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제물류거점육성에 대비해서 해석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서해안 중심의 동북아 물류 허브가 아니고 부산

신항과 광양항 중심의 물류 거점 입지를 확고히 시켜준 입장이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속에서 서해안축 중심의 동북아 물류 허브를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측 개발로 인해 국토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물동량만 가지고 항만물류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절름발이 상황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서해안 연안의 지자체와 각 지역 연구원은 국토균형개발 논리로 항만물류 개발도 개선해야 한다.

이호영(독일함부르크 항만청 대표) 첫째, 외국 허브포트인 함부르크와 비교해 본다면 부산항은 철도수송 및 트럭운송의 역할이 미비하다. 향후 남북 중단철도 및 도로의 통과가 이루어질 때 외국의 화물을 육상운송에 의해 우리 항만으로 가져오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철도 수송을 개발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블록 트레인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이것은 단말 물류까지 포함해서 철도와 트럭을 연계해 주는 장거리 수송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터미널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을 통해 수입의 확대를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일호(국토연구원 SOC 건설경제연구실장) 첫째, 전략적으로 간선이 될 수 있는 호남고속 철도를 조기에 건설되어야 하지만 도로와 철도의 경쟁력을 비교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서해안 축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동측방향으로, 동서방향으로 고속도로나 간선 고속화 도로를 만들어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 성장 동력을 이뤘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네트워크도시로 발전을 시켜서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지역이 협력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체계를 먼저 만들고 물류를 언급해야 한다.

채병선(전북대학교 교수) 첫째, 인프라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항만이면 항만, 철도면 철도, 도로는 도로만 논의하고 그 세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물류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포함된 비용의 발생이 어디로부터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항만, 철도, 공항 등 서해안 광역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경제성에 기초한 집중적인 자본투하와 개발로서 부산, 광양이 거론되고 있는데 서해안지역의 미흡한 기반구축으로 불균형의 심화가 예상된다. 더불어 항만 철도 공항은 국제적인 경쟁도 있을 뿐더러 자국 내에서의 광역자치단체간의 경쟁도 심화될 것. 국내적으로 지역 간 서로 안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리 기획조정팀장 이승형

도의회 업무보고

본원 한영주 원장은 9월 2일 제220회 도의회임시회의에 출석해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명)에 통합연구원 출범 후 2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본원의 일반현황과 진행 중인 연구사업실적, 하반기 연구사업방향 등에 대한 한 원장의 상세한 소개 형태로 이루어졌다.

여성정책연구소 기자간담회

본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전정희)는 8월 4일 전라북도 14개 시·군 순회방문 결과보고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여성·사회복지정책 기반,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복지 및 인권, 노인복지실태 및 현황조사 등이다. 여성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전라북도 시·군의 여성정책·사회복지정책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하고자 시·군 순회방문을 실시해 왔다.

여성정책연구소 정책개발간담회

본원 여성정책연구소는 8월 25일 전북도청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산하 3개과(노인·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담당자들과 함께 정책개발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2005년도 연구과제 추진현황 설명과 내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안한 연구과제로는 1.지역사회 복지지원 및 육구조조사기법 개발(사회복지과), 2.친환경적인 장모제도 개선방안(노인·아동복지과), 3.전라북도 노인 취업촉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노인·아동복지과), 4.아동복지시설 다기능화 역할(노인·아동복지과), 5.여성일거리 창출(여성가족과) 등 모두 5개 과제이다.

기본연구과제 중간자문회의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방안 등 본원이 수행하고 있는 18개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중간자문회의 및 보고회가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중간자문회의는 각 과제별 전문가들을 초빙해 본원이 추진하고 있는 기본과제의 연구성과 중간점검 및 이후 진행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005년도 연구과제 현황 (9월 2일 현재)

기본연구과제 : 18개 과제

연구과제명	소관부서
•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후보지 선정※	기획관
• 2005 전라북도 주요업무 자체 평가 도민만족도 조사	기획관
• 2007 전라북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라북도 재원배분 방안	예산담당관
• 군산항 물류 기·종점 분석에 관한 연구	경제정책관
• 전라북도 외국인투자유치 방안	기업지원과
• 전북지역 중소기업육성 중장기 계획	기업지원과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발전 방안	과학산업과
• 전북과학연구단지 기본계획	과학산업과
• 전북지역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 및 지원 방안	과학산업과
• 전라북도 국가기반 보호 체계 연구	자치행정과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발전방안	문화예술과
•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문화산업과
• 전라북도 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과
• 전북농촌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농업정책과
• 전라북도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가정복지과
• 전북지역 노인요양서비스 수요예측 및 중장기 시설 수급방안	가정복지과
• 전북지역 가족의 변화와 가족기능 강화방안	가정복지과
• 성매매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지원 활용	여성정책과

정책(수시)연구과제 : 7개 과제

연구과제명	소관부서
• 새청사시대 전북의 비전을 제시할 대형국책사업 발굴	기획관
• 새만금사업 자료집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 2005 전북여성백서※	여성정책과
• 민선3기 3년 성과 및 전북의 미래비전제시(완료)	기획관
• 『주5일제』 대비 종합대책(완료)	기획관
•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지역별 시책편) 작성(완료)	기획관
•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유치제안서 작성(완료)	정보통신담당관

협약사업 : 4개 사업 7개 과제

연구과제명	소관부서
•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	혁신분권담당관
• 과학기술자문위원 활용사업	과학산업과
•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자치행정과
-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완료)	자치행정과
- 전라북도 인적자원 DB구축※	자치행정과
- 전라북도 인적자원 아카데미 운영	자치행정과
- 전라북도 인적자원맵 발간	자치행정과
• 전북지역대학새만금연구소협의회 사무국 운영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수탁연구과제 : 8개 과제

연구과제명	소관부서
• 새만금 간척옹지의 토지이용계획※	국무조정실/국토연구원
• 새만금 신항만개발과 배후물류단지 개발전략※ (완료)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이전타당성 조사분석(완료)	총무과
•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자체 연구원과 합동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전북 도시계획 100년사 도록※ (완료)	건설행정과
•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지자체연구원과 합동연구)	교통개발연구원
•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완주군
• 전북개발공사 기업형태제도입 및 조직개편방안	전북개발공사

※ : 2004년 계속사업

PRCUD 전북라운드테이블포럼 개최

본원은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주리베라호텔에서 「새만금사업과 신항만개발」을 주제로 하여 국제적 전문가 20여 명을 포함한 국내외 참석자 200여 명 규모로 PRCUD 전북라운드테이블포럼을 개최한다.

- 주요 일정 -

10월 29, 30일 (토, 일)	새만금 현장답사 및 환영리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30일 새만금 현장답사 30일(일) 18:30 환영리셉션 	
10월 31일 (월)	개회식 및 라운드테이블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00 개회식 및 기초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지사 환영사 PRCUD의장(Mr. Cor Dijkgraaf, 네덜란드) 인사말 기초연설: Mr. Ivo Opstelten (로테르담 시장, 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유럽에서 로테르담의 역할, 로테르담항의 개발 역사 및 시사점 11:00 [라운드테이블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새만금의 당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북아경제권에서 한국의 역할 변화, 현존 항구 수용 능력의 불충분성, 허브항을 위한 경쟁 좌장: <국외> Eric Heikkila (PRCUD사무총장, 미국 남가주대 도시발전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미정 14:30 [라운드테이블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한국의 지역발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래 낙후지역으로서의 전라북도, 서울의 혼잡성과 주도권, 한국경제 공간구조의 변혁 좌장: <국외> Dr. Geoff Hewings (미국 일리노이대학 지역발전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미정 18:30 [만찬 및 문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전라북도 지사 문화행사: 전라북도 전통예술공연 	
11월 1일 (화)	라운드테이블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 [라운드테이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새만금종합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만금 항만과 주변시설에 대한 필요조건, 환경과의 연관관계, 관광산업의 가능성 좌장: <국외> Dr. Robert Stimson (호주 퀸스랜드 대학 계획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미정 13:00 [라운드테이블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투자와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차원지원, 민간부문투자, 국제기구의 참여 좌장: <국외> Ms. Carole Brookins (전 부시행정부 세계은행 미국 사무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미정 	

- 「전북발전포럼」 원고모집
 - 원고성격: 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칼럼, 논문 등
 - 제출기한: 수시모집
 - 제출방법: 이메일(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디스크와 함께 제출),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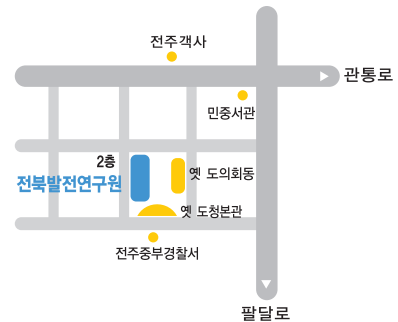
- 「연구과제」 공모
 -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송부해 드리며, 심사를 거쳐 공동연구참여 등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홈페이지 www.jd.re.kr(연구제안)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수)	최종라운드테이블 및 폐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 최종라운드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지사, PRCUD의장, 좌장 및 전문가 11:30 폐회식 12:00 환송오찬 	

국외 참가자 명단
David Dowall 교수(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Dr. Teresa Vazquez(미국), Dr. Richard Little(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s. Narelle Sonter(호주,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Mr. Terry Byrnes(호주, Byrnes and Associates), Mr. Paul Rabe(네덜란드), Dr. Kit Weddle(일본, L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Yukio Oguri 교수(일본, Chiba University), Dr. Koichi Sunada(일본), Chuan Fang Wang 교수(대만), Yiu-Kwan Fan 교수(홍콩,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 국내 참가자는 섭외중이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063-276-2060

연구원 청사이전 안내

본원은 9월 15일 옛 전북도청 서편청사(구 전북경찰청사) 2층으로 청사를 이전할 계획이다. 본원은 지난 3월 전북여성발전연구원과 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범했지만 공간이 비좁아 이원화 체제로 분리 운영되면서 애로가 많았으나 이번 청사이전으로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명실상부한 통합연구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전북발전연구원 새 청사 약도〉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전화: 063-276-2060 | 팩스: 063-276-2069

열린뉴스 구독신청
(063) 276-2060
 열린뉴스는 연구원소식을 전하는 열린지면입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PDF파일로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